

# 지방자치 정책브리프

## 지방예산 분류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

### 지방예산 분류체계 개편의 필요성

**지방예산분류체계는 중앙정부(국가예산)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준용**

- 이에 해당 지자체의 수입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획을 담아내지 못하고 정책에 관한 재정기록도 될 수 없는 구조

**지방사무의 예산편성은 사업계획별 분류를 통해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단위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르게 구성**

- 즉,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 내에서 지자체별 예산구조화 기법의 차이로 사업명을 통한 통계산출이 불가능한 구조

**현재의 예산분류체계는 지자체별로 사무의 세부적 관리가 어려운 구조**

- 예)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과거 품목별 예산분류 시에는 노인, 장애인, 여성복지, 보육지원 등과 같은 사무가 세항 단위로 관리되어 지자체 유형별로 과거와 현재의 자료를 손쉽게 산출
-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도 가능하였으나 현재 예산분류체계는 2008년도에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환되면서 지자체의 부문 이하의 단위사업이 일관성 없게 구조화되어 각종 자료의 산출이 매우 난해
- 일자리사업의 경우도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, 여성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예산규모나 수준 등에 대해 파악하기 힘들고 이를 파악하려면 별도의 인력, 시간, 노력을 들여야만 가능한 상황

**장기적인 시각에서 지방의 세출계획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예산분류체계의 개선 필요성 제기**

### 지방예산 분류체계의 분석 및 시사점

**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류체계는 13개 분야 52개 부문으로 구성**

- 분야 중 030 통일·외교, 040 국방, 130 통신은 중앙에만 있고 지방에는 없는 기능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분류체계 상에는 부재

**부문 중 012 국정운영, 015 정부자원관리, 021 법원및헌재, 022 법무및검찰, 024 해경, 054 교육일반, 084 공적연금, 092 건강보험, 122 철도 등은 국가예산에만 있고 지방에는 없는 세출항목**

- 반대로, 지방예산분류에만 있고 국가예산분류에서는 없는 것이 026 소방, 071 상하수도·수질~076 환경보호 일반 부문, 900 기타 분야

## 중앙과 지방의 분야-부문명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고 분야 또는 부문명이 상이

- 100번 분야가 국가예산에서는 농림수산, 지방예산에서는 농림해양수산으로 쓰이고, 103번 부문은 국가는 수산·어촌, 지방은 해양수산·어촌으로, 120번 분야 또한 국가는 교통 및 물류, 지방예산에서는 수송 및 교통으로 명시
- 특히, 지방의 경우 900 기타 분야가 하나 더 존재하지만 국가예산에서는 900번이 부재
- 지방예산에서 900 기타분야의 예산규모가 크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예의주시할 부분

## 이처럼 지방의 예산분류체계는 중앙의 체계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보니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관한 재정기록으로써의 역할에 한계

- 예) 지자체 기능별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예산서와 e-호조 기록이 분야 아래 부문(예: 기초생활보장, 취약계층지원, 보육·가족 및 여성, 노인·청소년, 노동, 보훈, 주택, 사회복지일반)까지만 편성되어 관리
  - 해당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

## 지자체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에도 단위사업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명을 통한 통계 산출이 불가

- 다양한 정책들이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단위사업이 일관성 없게 구조화되어 각종 자료의 산출이 매우 난이

## 변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환경을 예산분류체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방예산 분류체계 분석결과 개선해야 될 점

## 지방예산 분류체계의 개편방향

### 품목별 예산제도가 성과관리면에서 미흡하다는 단점 극복을 위해 도입된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

- 지방예산이 품목별로 편성되던 때에는 세항목(노인복지, 장애인복지, 여성복지, 보육지원 등)으로 관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구조화 일관성 가능
- 품목별 예산제도 분류 방식의 장점과 사업별 예산제도 분류방식의 접목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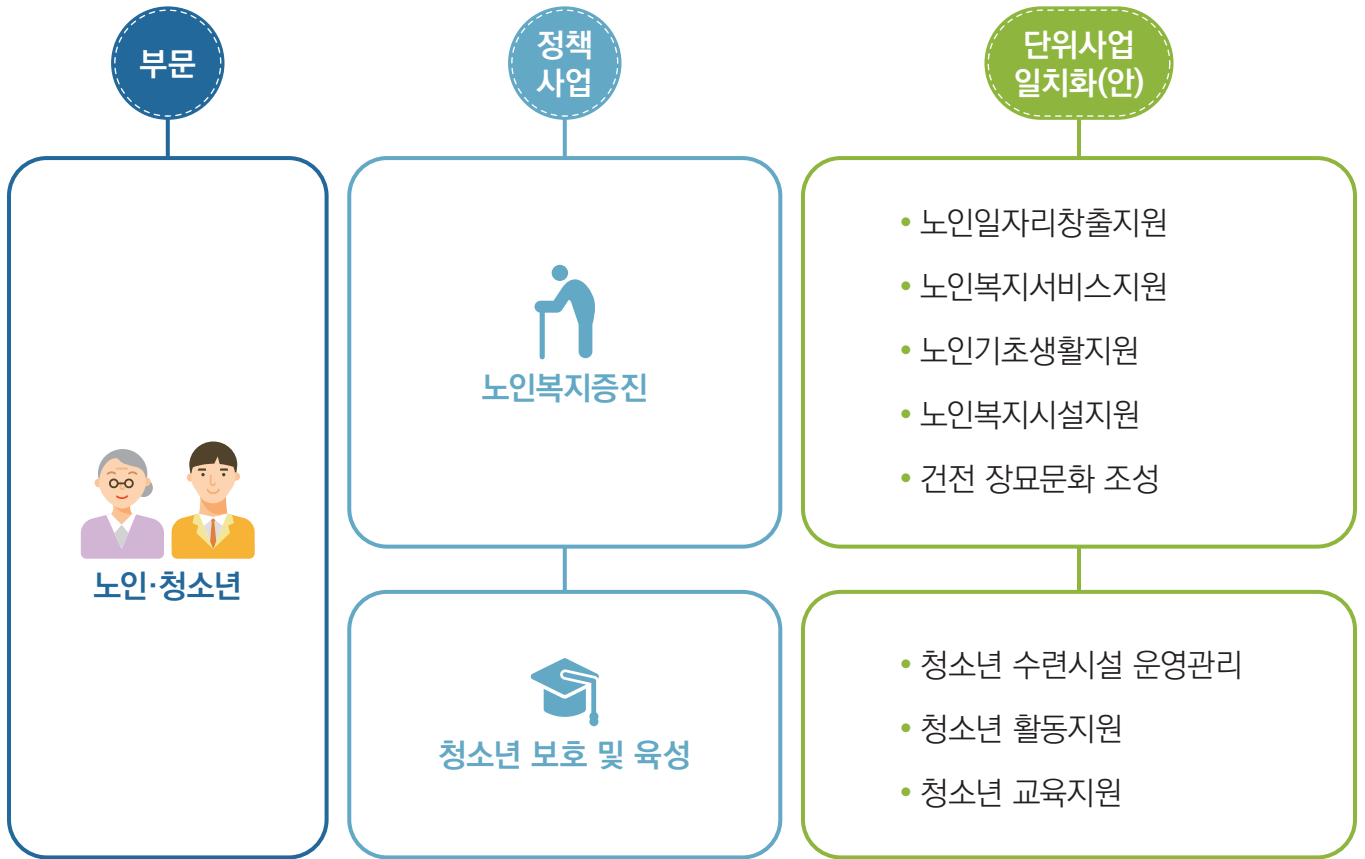
### 분야, 부문, 정책사업, 단위사업, 세부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분야 및 부문의 경우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

- 정책사업 단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치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 검토 필요
- 예) 사회복지분야 노인·청소년 부문의 경우 예산편성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별 분류 기준인 노인·청소년 부문 분류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부문 하위의 정책사업의 경우 부서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
  - 이를 정책사업 아래 수준인 단위사업 수준에서의 사업명 일치화 필요성이 제기

### 단위사업 수준에서의 일치화된 사업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표와 같이 제시

- 지방교부세 수요산정항목과 기존 품목별 분류 방식에서의 장-관-항 항목, 사례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 분류에 있어서 공통되는 항목을 활용하여 단위사업 분류 개선안을 제시

▣ <표> 노인·청소년 부문 사업별 예산편성 개선 방안(안) ▣



출처 : 저자작성

▶ 참고자료 : 김성주·윤태섭(2017), 「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분류체계의 개선방안」, 한국지방행정연구원

▶ 내용문의 : 김성주(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, 033-769-9874, sjkim@krila.re.kr)

지난호 보기 : 국가 및 지역연계를 통한 미세먼지 대응방안 구축 필요(박승규 연구위원)

원문보기 ▶

✉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[brief@krila.re.kr](mailto:brief@krila.re.kr)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.